



전북도-경찰청 오늘 국정감사

새만금 개발 · 국제공항 건설 추진 1심 패소
완주-전주 통합 · 하계올림픽 등 논의 대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주시 화순군)는 28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새만금 개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추진 1심 패소, 완주-전주 통합 관련 현안과 전주 하계올림픽 추진 상황 등이 주요 논의 대상으로 예상된다.

전북도민 사이에서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전북에서 추진하는 주요 현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아 '땡탕 국감'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에서는 전북 발전과 직결되는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실질적이고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크다.

/이만호 기자

전북 벼·논콩 등 피해 '농업재해 인정' 도내 피해농가 복구비 지원 길 열렸다

김관영 도지사, 피해상황 점검 후 정부에 적극 건의 반영

전북특별자치도는 벼 수발아 피해가 농업재해로 공식 인정받아 피해농가에 실질적인 지원의 길이 열렸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8월 말부터 10월까지 계속된 잦은 비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자 주산지별 중심으로 현장조사에 나섰다. 김관영 도사는 논콩과 벼 수발아 피해현장을 직접 방문해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작물 피해 상황을 확인한 뒤,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속한 대책 마련과 농업재해 인정을 건의했다.

벼 수발아는 익산·김제·부안 등지에서 3,360ha(잠정) 규모로 발생했으며, 건의 결과 이날 농업재해로 인정받았다. 피해농가는 시군 읍면동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되고, 시군에서는 수발아 피해벼 수매 물량을 확인해 농가별 복구비를 산정할 예정이다.

앞서 가을배추 및 논콩 피해도 지난 10월 23일 농업재해로 인정된 바 있다. 현장조사에서 가을배추는 익산·정읍·고창 등에서 322ha(잠정) 규모

로 뿌리내림 부진과 무름병이 발생했고, 논콩은 익산·정읍·김제·부안 등 5,420ha(잠정)에 달하는 일과 줄기마름, 뿌리썩음 증상을 확인했다.

전북도는 이 같은 피해 조사를 토대로 농식품부에 지원을 적극 요청해 가을배추와 논콩은 전북·경북·충북 3개 시도에 한해 농업재해로 인정되면 벼 피해 농가들이 복구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도는 현재 10월 31일까지 벼 수발아 등의 피해신고를 받고 있으나,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접수 기간을 추가 연장할 방침이다. 피해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기후변화로 이상기후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민들의 어려움을 최우선으로 살피고, 신속한 대응과 중앙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 농가 경영안정과 농업회복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전주매일



27일 파푸아뉴기니 국제무역 · 투자부 리처드 마루(Richard Maru) 장관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전북특별자치도를 공식 방문해, 김관영 도지사와 농업, 교육, 국제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면담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 파푸아뉴기니와 농업·교육 등 다분야 협력 강화 | 마루 국제무역 · 투자부 장관 등 전북 방문

전북특별자치도는 27일 파푸아뉴기니 국제무역 · 투자부 리처드 마루(Richard Maru) 장관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전북도를 공식 방문해, 김관영 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농업, 교육, 국제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전북과 파푸아뉴기니 간 농업 · 산업 분야 교류를 이어가는 연속 협력의 일환이다. 양측은 앞서 8

월 파푸아뉴기니 농림부 차관보 등 고위급 인사의 전북 방문, 9월 원광대학교의 현지 방문 등을 통해 가금산업, 인재양성, ODA 기반 사업 등에서 실질적 협력을 모색해 왔다.

이번 대표단은 전북의 가금산업체, 국가식품클러스터, 원광대학교 등을 잇따라 방문하며 협력 사업의 구체적 실행 가능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면담에서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은 대

한민국을 대표하는 농업 중심지로, 농촌진흥청,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관련 인프라와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파푸아뉴기니의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파푸아뉴기니 정부가 전북도와 교류에 적극적인 만큼, 문화와 스포츠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전북도의 국제행사 유치에

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가금산업 기반 국제협력사업 발굴과 교육 · 연구기관 간 교류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양 지역 간 실질적 협력 성과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국제협력 모델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출범, 30년 지방자치 역사의 '결실'

민선 8기, 2024년 1월 18일 공식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는 30년 지방자치 역사의 결실이자 새로운 도약의 시작이다.

《관련기사 3면》

27일 전북은 제주, 세종, 강원에 이어 네 번째 특별광역자치단체로 전환하며 33개 특례를 확보했다.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고도의 자치권 보장과 독자적 발전 계획 수립, 행정 · 재정적 자율성 확대를 의미한다.

확보한 33개 특례는 교육, 산업, 문화, 복지, 환경 등 전 분야를 아우른다.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중앙정부의 일방적 정책 시행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발전 전략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완성이라 할 수 있다.

128년만에 역사적 도약
33개 특례로 분권 새 시대
지역균형발전 청사진 제시

지방자치와 함께 중요한 과제가 지역 내 균형발전이다. 도는 동부권특별회계를 통해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등 6개 지역의 인프라 구축과 산업 육성, 관광 개발 등을 지원하며 지역 간 격차 해소에 힘쓰고 있다.

2007년 시작된 도 산하기관 이전도 균형발전의 중요한 성과다. 인재개발원(남원), 산림환경연구원(진안), 축산연구소(장수), 보건환경연구원(임실), 도로관리사업소(순창) 등이 동부권으로 이전돼 지역 발전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2005년 도입한 국가균

형발전특별회계 제도를 적극 활용해 낙후 지역개발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각 시군의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특례는 전북 내 지역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례를 활용해 각 시군의 문화자원을 발굴 · 연계하여 전북 전체를 하나의 문화관광 벨트로 조성하는 작업도 병행 중이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 참여다. 2019년 본격 시행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주민들은 예산 심의에 참여하고 사업을 제안하며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직접 개진할 수 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022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도 지

방자치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정책 감시 기능이 강화되고 민주적 거버넌스가 확립됐다. 집행부와 의회의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며 지방자치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2023년에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 위원회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지역 주도 성장을 도모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민선 3기부터 추진된 새만금 사업은 전북의 최대 프로젝트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이다. 재생에너지클러스터, 스마트 수변도시, 관광거점화 사업, 종자산업혁신클러스터 등이 동시에 진행되며 새만금은 명실상부한 미래 성장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 2면에 계속

/이만호 기자

